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3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3.(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5270)	담 당 자	김명화 사무관(044-203-5214)

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.

- 코로나19,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-

- 1~3년 주기의 방문·대면 점검 → 상시·원격·비대면 점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**8. 3일(화)**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**「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·관 협의회」를 개최하고, 「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」을 발표**하였음

○ **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**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, 1인 가구 증가 등 **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**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

< 「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·관 협의회」 개요 >

◇ **일시/장소** : '21.8.3.(화) 16:00~18:00 / 아셈타워 서울 37층 회의실

◇ **참석자** : (정부)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(주재),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
(지자체/공공/민간) 서울시, 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, 이종수 교수(서울대), 김지효 연구소장(옴니시스템), 정동원 변호사(화우), 박병훈 사무총장(EMS협회), 김찬오 교수(서울과기대), 지광석 팀장(소비자원), 이찬수 팀장(LS ELECTRIC) 등 총 17인

□ 정부는 **'73년부터** 주택·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**1~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**하고 있으나,

○ **코로나19 확산, 생활방식 변화**(1인가구 증가 등) 등으로 인해, **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*** **점검**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**점검 효과가 하락**하고 있고,

* 방문·비대면 점검 비중(%) : ('10) 10.0 → ('15) 25.8 → ('19)43.1 → **('20)64.2**

○ 전기설비 노후화*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, **1~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**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,

*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(%) : ('15) 63.4 → ('18) 68.4 → ('21) 72.1

○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**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***은 **20%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** 있어서,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

* 전기화재 점유율 추이(%) : ('17) 18.1 → ('18) 21.8 → ('19) 20.3→ ('20) 21.1

【 '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' 주요내용 】

① 「1 ~ 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 → 상시·비대면 점검」체계로 전환

□ **(취지)** '원격점검장치, 통신망, 관제시스템'을 이용한 **상시·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하여,**

○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**누전·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·거주자에게 통보**하여 **즉시 안전점검**을 받도록 함으로써,

○ 소유자·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**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**할 계획임

* <참고> 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(방문→원격) 개념도 참조

□ **(보급)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·기존시설, 적용 용이성** 등을 고려하여 **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,**

○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**도로조명시설(가로등·신호등·CCTV 등)에 우선 설치**하고('22~'23)

○ **취약계층의 노후 주택**(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)과 **다중이용시설**(전통시장 포함) 등에 대해서 **시범 설치**('23~'24)를 추진하고,

○ '25년부터는 **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*망과 연계하여 원격 점검기능을 갖추도록** 할 계획임

* 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,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)

□ **(법·제도 정비)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**하고, **민간의 제품 개발·투자 등**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,

○ 원격점검장치의 **국가표준**(KS) 제정, **「전기안전관리법」 개정**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,

○ 원격시스템을 통해 **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**할 수 있는 **관제 시스템**을 '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임

2 노후주택 매매·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신설

□ 한편, 원격·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, **노후**('15년 이상) **주택의 매매·임대 시 옥내·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**할 계획임

○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(준공 15년 이상) 주택의 매매·임대로 소유주·거주자가 바뀔 경우 **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**하고, **매매·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**토록 함으로써,

○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**원격·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**하는 한편, **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**을 할 수 있고, **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**할 것으로 기대됨

□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**점검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**가 기대되는데,

○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**고위험성 설비**(다중이용시설, 산업단지 등), **신기술 전기설비**(ESS, 전기차 충전소, 신재생E 설비 등) 분야로 재배치하여 **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**할 계획임

【민관 협의회 회의내용】

□ **원격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**민·관 협의회**에서는 "**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**"와 "**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**"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음

□ **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**은 모두 발언을 통해 "최근 **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사물인터넷(IoT)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**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인 바,

○ 오늘 발표한 **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**될 수 있도록 **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**해주시길 바란다"고 당부하였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명화 사무관(044-203-5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| **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(방문→원격) 개념도**

(현행, 방문점검) ①사전안내→ ㉮ 방문 · 대면점검→ ③(부적합시) 재점검→ ④미개수시 개선명령
↳ ㉯ 부재시 외부점검⇒고객 요청시 안전점검



(개선, 원격점검) ①원격점검 → ②이상신호 통보(관제센터→고객) → ③고객 점검 신청
(긴급점검 필요시 점검 안내) → ④안전공사 안전점검 및 개·보수 내용 통보

